

도시공원 '민간 아파트' 안마당 되나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자 의존율 88.6% 가장 높아

13개 광역단체 매입비 절반 차지

공원 공적 기능보다 아파트 숲 우려

“도심 속 허파인 도시공원이 민간아파트 앞마당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주객이 전도돼 공원의 공적기능 유지 보다는 아파트 개발이 우선시 되는 것 아니냐.”

내년 7월 1일 공원일몰제 시행에 대응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사실상 일부 건설사와 입주민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에서도 터져 나왔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국고지원과 지방채 발행에 난색을 보이면서 자치단체가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건설사가 공원 부지를 매입해 일부는 아파트를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 자본 의존’ 방식의 사업이 주가 되면서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전국 실외대상 공원부지 363.6㎢ 가운데 난개발이 우려되는 162.7㎢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 향후 5년간의 광역단체별 공원조성계획을 완성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서울과 울산, 세종, 제주를 제외한 13개 광역단체들에서 우선관리지역 전체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재원(10조8555억원 추정)의 절반이 넘는 5조7071억원(52.6% 추정)을 민간공

원(25.6㎢) 조성을 통한 민자로 조달할 계획이다.

민자 의존도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시로 지적됐다. 광주의 경우 우선 매입하기로 한 9.9㎢ 공원 면적의 68.7%(6.8㎢)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계획됐으며, 필요 재원(1조2902억원 추정)의 88.6%인 1조1436억원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광주시는 내년 7월 1일자로 공원 구역에서 해제되는 25곳의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가운데 9개 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 9개 공원마다 사업자(건설사)를 선정해 공원 부지별로 5~20% 공

간에 모두 1만2607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80~95%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하게 된다. 해제 위기에 놓인 도시 공원을 지킨다는 긍정 평가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보존하는 공원이 특정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입주민의 앞마당 구실을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광주의 경우 우선협상자 변경 과정에서 건설사 특혜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건설자본에 기반한 공원 보존 사업에 대한 시민 사회 시선이 곱지 않고, 일부 사업 대상지의 경우 좌초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박재호 의원은 “도심의 공원녹지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공역지적으로 선택했던 민간공원특례 사업이 주객이 전도돼, 공원의 공적기능 유지 보다는 아파트 개발이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도시계획시설 해제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당장 매입이 필요한 공원을 선별해 국고를 투입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4조원 규모의 토지은행적립금을 지자체가 활용해 공원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막식 2019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개막식이 7일 오후 장흥군 인양면 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열렸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과 정중순 장흥군수, 마재주 박람회추진위원장, 김한중 동의회 부의장 등 참석자들이 개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박람회는 '건강한 삶의 길을 보여 드립니다'란 주제로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전남 도시가스 보급률 6년째 최하위권

50%대 머물러... 전국 평균 68.9%

전남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6년째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 갑)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도시가스평균 보급률은 68.9%수준이었다. 하지만, 전남은 6년째 50%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을 비롯한 광역시의 보급률은 모두 70%대로 상당 수준 높은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충북과 경북도 2015년부터 60%대로 진입하는 등 개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남도와 강원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각각 50%대와 40%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일부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가스관을 연결하는 배관 비용 때문이다. 현재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으로 추정되는 거리는 약 3734km 구간이다. 이에 소요되는 배관 건설비만 총 2조 631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미공급 지역의 경우 수요 밀집도가 매우 낮아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다.

송 의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도 보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면서 “미공급 지역의 투자는 에너지전환 시대에 천연가스의 중요성과 소외지역 보급이라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예특회계)를 손질해서 천연가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거나 독립회계를 만들어 투자비 회수등의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에너지·투어·바이오 발판 전남행복시대 만들자”

김영록 지사 ‘블루 이코노미’ 순천대 특강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7기 새천년 전남의 비전으로 제시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지역 대학생, 오피니언 리더 등에게 알리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 지사는 7일 순천대 초청으로 명사특강을 진행, 순천대 학생과 교직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신의 공직 경험과 함께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새천년 비전으로 삼은 이유를 소개했다.

김 지사는 특강에서 “전남이 비교 우위에 있는 바다, 섬, 하늘, 바람 등 지속가능한 블루자원을 활용

한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 지역성장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블루 이코노미 6대 핵심 프로젝트인 에너지·투어·바이오·트랜스포트·농수산·시티를 소개하고 “이를 발판으로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에너지, 바이오·메디컬, 드론 등 미래형 신산업 분야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해 ‘청의 융합형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며 “청년 무한도전 프로젝트, 글로벌 비전캠프, 글로벌 리더 육성, 전남스타 200인, 선도인재 아카데미 등으로 구성된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환경산업 육성 국비과제 발굴 나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

전남도가 민선 7기 새천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해 환경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국비 과제를 발굴하고 중장기 전략과제를 기획하는 등 신규 미래 사업을 마련할 방침이다.

7일 전남도와 재단법인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은 전남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과제 발굴과 환경 분야 중장기 전략과제 기획 출범식 회의를 열어 국비 확보 성공 의지를 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남환경산업진흥원장과 환경산업 R&D 각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가 참석해 국고 확보 사업 추진 과제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해 수소에너지 농업활용 기반 시설 원예단지 조성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자원 재활용’, 환경측정분석 스마트

관리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환경융복합’, 환경부 신규 환경융합거점단지 전남 유치에 위한 ‘환경인프라 구축’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들 분과위는 중장기 환경산업 국고과제의 틀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산·학·연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분과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호남권 환경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이범우 전남도 기후생태과장은 “앞으로 이뤄질 기획회의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 분야 국고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의 목표를 정하고 환경산업에 기술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질적 협력체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19 대학·민족 국향대전

10.18. ~ 11.3. 함평엑스포공원 일원

임시정부 100년! 백만송이 함평 국화와 함께

주최 | 임평군 주관 |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국화동호회